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인의
시민성 함양에 관한 연구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인의
시민성 함양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본고는 한국사회의 국민통합은 보편적인 시민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에서 출발한다. 이런 신념 하에서 다양성의 조화를 이뤄나가기 위해 우리 시대에 필요한 보편적인 세계 시민이란 무엇인가? 세계화가 진행되고 국경이 무너지면서 세계 시민은 기존의 국가와 민족에 기인하는 가치관과의 충돌이 발생하는데 시민성 함양을 통해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해방이후의 한국사회의 발전단계를 4단계로 보면서 각 단계를 한국 국민의 삶의 영역 7가지로 보아 각 단계에서 두드러진 시민성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은 정치경제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이런 국민들의 삶의 영역들에서 강조되어야 할 시민성의 요소들이 잘 통합될 때 가능한 것으로 본다.

[주제어] 시민성, 사회화, 반사회화, 사회적 역할, 국민통합

심 연 수 (Shim, Yeon-soo)*

(E-mail : shimys@honam.ac.kr)

논문접수일 : 2013년 1월 1일

논문심사일 : 2013년 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3년 2월 10일

I. 서론

해방이후 국민통합의 문제는 국가건설과 발전에 있어서 매우 주요

* 학위취득대학 : 서울대학교
현직: 호남대학교 교수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328-2010-1-B00005)

한 문제로 다루어져왔다. 초기에서는 국가건설을 위한 국민통합의 정체성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역사적 단절과 해방이후의 분단극복을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이념에서 찾고자 하였다. 경제성장 시기에서는 ‘잘살아 보자’는 기치 하에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통합이 지배적인 모토가 되었다. 민주화의 과정에서는 권위주의적 통합에서 벗어나서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국민통합방식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에 국제관계가 심화되면서 민족국가 단위 내에서의 국민통합 방식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국가권위 당국(national authorities)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민의 권리와 의무들과 국제단위의 각종 기구들에 의해 부과되는 규제들 간의 갈등이 점증하게 되었다(Zolo 1993, 257). 이런 의미에서 국민통합은 전통적인 영토와 단일민족의 개념을 벗어나서 복합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시민성은 시민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치관, 행동 양식, 사고방식, 기질 따위의 특성을 말하는바 탈냉전 이후에는 세계시민성의 개념이 타당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우리사회의 복잡성에 따른 상호이질감과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시민성을 통해서 국민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출발한다. 이런 신념 하에서 더욱 분화되어가는 사회의 다양한 부분들 간의 조화를 이뤄나가고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보편적인 세계시민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국경이 무너지면서 세계시민은 기존의 국가와 민족에 기인하는 가치관과의 충돌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세계 시민성 함양을 통해 국가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을 통합하여 사회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바람직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통한 일차적 사회화와 건전한 직장관 협력적인 이웃 관계 등이 필요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의 궁극적 목표는 타자의 자아실현과 공동체의 번영에 두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강대기 2001).

국민들의 삶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으나 하나의 망(web)처럼 연결되어 있다(Capra 1996). 그 중의 하나인 시민성의 영역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 국가 내에서 개인들 간의 관계에 국한되어왔고 시민적 영역(civil domain), 사회경제적 영역(socio-economic domain), 문화적 집단적 영역(cultural or collective domain)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추병완). 그리고 국민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냐에 따라서 시민, 노동자, 소비자, 가족성원, 친구, 사회집단성원, 자아로 그 역할을 나눌 수 있다. 제도화된 교육기관 등을 통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이런 다양한 역할에 따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다양한 역할에 따른 삶(life)의 패턴(pattern)¹⁾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패턴을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삶 체계의 구조(structure)²⁾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Capra 1996, 158). 생명 혹은 무생명의 체계에서도 조직의 패턴은 그 구성요소들의 관계의 혼합을 의미한다.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인식되는 것들로 나타내져야 한다는 것이다. 체계의 구조는 조직패턴의 외형적 전형이다. 즉 조직의 패턴을 설명한다는 것은 관계들을 추상적으로 그려나가는 것을 뜻한다(ibid., 159). 한명의 국민의 삶의 패턴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수많은 사회생활의 총합적 기능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어떤 국민(패턴)은 많은 다른 역할구조들에서 외형적으로 구현된다. 또한 무생물체와 달리 인간사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 상호 발전하고 성장 진화해 나간다. 국민의 삶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자기조직(self-organization)의 패턴을 구현해 나가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과정은 패턴과 구조를 연결시키는 것이며 조직의 패턴은 다름 아닌 지속적인 국민의 자기구현과정에서 패턴과 구조사이를 연결하는 것이다

1) 형식(form), 질서(order), 성질(quality)로도 불린다.

2) 실질(substance), 질료(matter), 양(quantity)로도 불린다.

<표 1> 생명체계의 주요기준

| 주요기준 | 설명 |
|----------|----------------------------|
| 조직패턴 | 체계의 필수적인 특징을 결정하는 관계들의 혼합 |
| 구조 | 체계의 조직패턴의 외형적 구현 |
| 생명(삶) 과정 | 체계의 조직패턴의 지속적인 구현에 수반되는 활동 |

출처: Key Criteria of a Living System(Capra 1996, 161)

시민성 함양을 통해서 국민통합과 국가 사회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이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온 크게 7가지의 주요한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Superka and Hawke 1982, 577-78). 국민들의 사회적 활동에서 있어서의 특정영역이나 사회적 역할 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들이 통합 조정되어진 시민성이 향상될 때 국민통합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훨씬 유리할 것이다. 국민들의 사회적 삶은 시민으로서의 역할, 노동자로서의 역할, 소비자로서의 역할, 가족성원으로서의 역할, 친구 및 사회집단의 성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아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국민들이 시민, 노동자, 소비자, 가족성원, 친구, 사회집단의 성원, 자아로서 세분화된 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 국민통합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각의 주요역할에 있어서 시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시민성 교육을 담당할 기관이나 단체가 요구되며 국민들이 처한 역할에 따라 그 시민성 교육의 대상과 주체는 달라진다. 이렇게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 중심으로 시행해 나가야하는 배경을 보면 국민국가 단위의 정치영역에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시민성이 그 고유의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세계시민들의 상호연결성(interconnec-

tedness), 즉시성(immediacy), 의사소통의 투명성(transparency)이 과거 알렉산더 대왕 시절의 세계시민성과는 다른 세계시민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Israel 2012, 7-10).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는 국민들의 사회적 삶의 7개의 주요 역할영역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먼저 많은 시민성의 기능들은 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선량한 국민들은 법률에 복종해야 하고, 지성적으로 투표를 해야 하며 또한 공공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의 시민성 형성에는 과거로부터 물려받고 있는 역사 문화 전통적 영향과 학교 교육 등을 통해서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목표에 따른 영향이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시민은 정치질서인 도시 지역 및 국가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로서 오늘날 국민과 동의어로도 쓰인다. 노동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경제 질서의 구성원이다. 자본주의 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비자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소비활동을 한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한다.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교육수준,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경제사회에 참여한다. 전통질서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은 부부를 중핵으로 그 근친인 혈연적으로 관계있는 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생활공동체이다. 학연혈연지연관계를 배경으로 한 친구는 보통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이면서 가깝게 오래 사귀어 사람이거나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어울리는 관계이다.

사회집단이란 구성원 사이에 ① 공통적인 관심의 대상(목표)이 있고, ② 어느 정도 안정된 지속적 상호작용이 있으며, ③ 그 결과로 일정한 역할 분화에 의한 조직성이 있고, ④ 구성원이 공통적인 집단 활동에 여러 형태로 참가하며, ⑤ 표준화된 행동양식으로서의 규범이 형성되어 구성원의 행동을 규제하고, ⑥ 일정한 공동소속 감정이 있는 집단이다. 사회집단 내에서의 구성원의 행동은 동일하지 않으며, 저마

다 다른 행동유형에 따라 상호작용이 행하여진다. 사회집단의 기능은 ① 정서적인 안정을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기능과, ② 집단목표의 달성을 효율화하는 기능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마지막으로 사고, 감정, 의지 등의 여러 작용의 주관자로서 이 여러 작용에 수반하고 이를 통일하는 주체로서 자아가 있다.

국민들은 시민성 함양을 통해 사회적 역할 속에서 창조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가치판단을 해나가면서 기능적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은 7개의 주요역할을 통해서 시민성 함양을 해나가면서 우리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한다. 국민들은 시민으로서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의 정치적 국면에 참여한다. 소비자와 노동자의 역할은 각각 직장과 작업장에서 필수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밀접한 개인 상호간의 관계의 2개의 주요영역은 친구와 가족 성원 역할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다.

또한 국민들은 다양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면서 민족 종교 사회경제적 계층집단에 속해 있다. 이런 집단과의 관계와 동일시(identification)는 앞의 다섯 가지 역할과 마지막 역할인 자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보통 자아라는 용어는 자아 정체성의 개발과 명료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한 관계들로 구성되는 역할을 정의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국민들은 통상 사회화와 반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시민성 관련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행동을 해나가는 데 통상 7가지의 사회적 관계들로 구성되는 역할행동 속에서 시민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민성은 국민들의 분화된 역할의 종합적 성격을 갖는다.³⁾

여기서는 국민통합을 위해서 한국 국민들의 시민성 함양이 역사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변천해왔고 이에 대한 정부역할은 어떠했는가를

3) 원래 사람의 마음은 분화된 자아들의 종합이며 각각의 자아는 특수한 질료에 관계하고 모든 자아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현재의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자아들이 이미 차별적으로 만족된 바에 따라 체계적인 가치치를 배당하는 전체적 통제자에 의해 규제된다(Hardin 저·황수의 역 1995, 38).

살펴본다. 특히 국민들의 사회적 삶의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에 따른 역할에서 시민성의 어떤 내용측면이 강조되었는가를 분석·검토해 본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사회화와 반사회화적인 측면에서의 단순한 검토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삶의 영역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시민성의 내용들에 대한 통합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사회화와 반사회화의 조화로운 시민성 함양

전통적인 국민국가(nation-state)와 정치공동체의 영역 내에서 다루어져 왔던 시민성에 관한 연구는 최근 세계화(Globalization)가 진행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국민들을 생각하는 차원으로 진전되었다. 국민들이 갖는 의무와 책임영역이 세계로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제도적 구조의 진전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이 국민들의 시민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시민성(citizenship)교육의 목표는 “선량한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뜻하고 도덕적이고 인간다운 지적인 시민들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해왔다. 또한 시민성이 무엇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들은 많지만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기대되는 행동양식들에 관해서 개념적 정의들이 달라진다. 그러나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투표하고 법률에 복종하고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고 공직에 임후보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쟁점들에 관한 폭 넓고 도덕적인 결정을 하는 것”과 같은 공통의 내용을 포함한다. 선량한 시민성은 생태학, 공공 혹은 사적인 건강, 화재예방, 오락, 교육, 소비자와 다른 경제적 결정을 하여 자선사업에 아낌없이 돈을 내놓거나 그것을 돕는 것 등 사회와 사회과학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망라한다(Mehlinger and Davis 1986, 54-55).

전통적으로 시민성교육과 관련된 두 영역으로는 사회화 및 반사회

화가 있다. 시민성교육과 사회화는 비슷하지만 시민성교육은 강한 평가적 도덕적 성분을 갖고 있다.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그들 사회문화의 관습을 사고와 행동의 유형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은 사회화이다. 하지만 시민성교육가들은 시민들과 사회를 위해 어떤 교육적 내용이 좋은가를 대부분 알고 있으며 나아가서 시민들이 이런 교육적 내용을 수용하기를 바란다.

즉 시민성교육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특정주제에 관한 항상 강한 가치를 강조하여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의식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회화는 국민들에게 사회유지에 필요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시민으로서의 사고와 행동유형을 가르치기 위해 문화에 의해서 행해지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전체과정을 다룬다.

사회화의 과정에서 사회의 많은 가치들은 어떤 특정한 문화 속에서 구체화된다. 따라서 그 문화의 사회화 노력들은 시민성의 목표, 즉 국민들에게 지배적인 영역(areas of governance)에 관해 친절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다. 사회화를 통해서 국민들은 사회적·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태도를 전수하게 되고 민주주의 분화를 이해하며 민주주의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 관습들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독립성과 창조성 그리고 비판성은 부족하다.⁵⁾ 사회화는 사회의 현존하는 관습·전통·규칙 등을 전수하는 일종의 보수적 과정으로 국민들의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순응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사회화과정만을 통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가치와 사회관습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지능·창조성·독립성을 통해서 개개인의 진정한 선량한 시민성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4)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크게 두 방향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학습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라 하겠다”(차명재 2003).

5) 한국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시민성 함양을 위해 활용되었던 분야이다.

이에 반해 반사회화(counter-socialization)⁶⁾ 과정은 국민들이 사회유지와 순응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이성을 계몽하고 책임 있는 사회비판을 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사회화 과정은 국민들이 민주주의 실천능력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민주 시민적 자질로 반성적 사유를 통한 갈등의 창조적 해결능력, 즉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필요와 중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진정한 선량한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 사회화과정은 반사회화 과정에 의해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반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으로서 독립적인 사고와 책임 있는 사회비판을 하게 되며 주변 공공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선량한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는 어떤 사회와 정부에서도 사회화와 반사회화 과정이 조화롭게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성 함양에 관한 반사회화와 사회화의 균형유지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민국가의 위상이 약화되어가는 양상 속에서 더욱 요구된다. 속고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위해서 소수엘리트에 의한 의사결정 보다는 다수 시민의 숙고와 토의에 따른 질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반사회화와 사회화의 과정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권위주의체제 이후 참여민주주의가 활성화되면서 시민사회의 반사회화적인 측면의 시민교육이 강하게 대두된 점도 이런 측면을 이해하게 한다. 국민들은 역사적 존재로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과거를 알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한국 국민들의 시민성 함양에 영향을 미쳐왔던 점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역사적 조건·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역사적 조건은 한국 국민들의 시민성 함양에 영향을 미쳐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한국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민주화의 과정이후에 참여 민주적 시민교육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분야이다.

Ⅲ. 사회적 삶의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에 따른 시민성 함양

한국 사회에서 국민통합의 필요성은 사회병리현상과 사회문제 및 기존 제도의 문제점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⁷⁾ 국민들의 시민성 함양을 통한 국민통합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국가의 존속성이란 당위적 명제 하에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의 함양이 요구된다. 국민통합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상이한 이해관계와 정서를 가진 국민들 간의 협력적 유대관계의 형성’을 말한다.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통합에 필요한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국민들 간의 협력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민주적인 사회 통합의 의미는 무엇이고, 시민사회에서 사회통합의 원칙과 철학은 무엇인가? 오늘날 어떻게 이민자와 이민자 후세대를 사회 전체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구성체인 개인과 사회적 연결을 맺는 관계로서 사회통합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요구된다. 국민통합은 개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으로부터 시작되며 여기에서 타인들에 대한 존중과 사고, 마음가짐 등을 공유하려는 마음이 자란다. 따라서 국민의 합치된 의식도출이 과제가 된다.

7) 급속한 민주화, 자율화, 세계화의 진행으로 전환기적 전통을 완전하게 치유하지 못하고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 등에 의한 국가정체성 약화, 우리사회의 계층, 지역, 세대, 다민족간의 갈등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국가에 대한 애국심, 충성심, 희생정신의 고양.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팽배. 이태올로기 중심의 국민통합의 극복. 관과 공교육 중심에서 벗어난 다양한 시민교육의 장 마련. 사회적 긴장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합의를 제도화. 통합된 가치와 신념체계의 정체성(기억의 정책을 통한 국민통합). 계층, 이념, 지역, 세대 간의 갈등. 범죄와 비정상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신건강유지와 사회치유 등의 문제들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역사 시대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시민성은 과거 이후로 한국정부와 국가가 처한 상황과의 관계에 따라 정립되어왔다. 즉,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휴머니티 발전과 아울러 국가발전과 지속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시민성을 설정하고 시민성 함양에 요구되는 사회적 조건을 구비하면서 교육적 노력을 다해왔다. 그동안의 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하여 시민성 함양과 관련된 정부역할과 정책을 분석해 볼 수 있다.

1. 권위주의체제 생성기

해방이후로 한국사회의 정신적 뿌리는 혈연적 유대에 의한 학벌 지역혈연주의와 유교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가운데 서구식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도입되었다. 한편 해방이후에도 일제의 잔재는 유교윤리와 혈연주의와 혼합된 상태로 국가재건에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는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한 민주선거와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운영 방식은 미숙하였으며 서구 자본주의적 경제생활방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덜 훈련되고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정치행위를 하는 시민들은 서구적 민주주의정치를 일거에 뿌리내리게 할 수 없었다. 정치 지도자들 역시 압도적 다수 시민들의 정치정향을 리드하고자 했으나 ‘한국적 민주정치’상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다.

이 시기에선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주도적이고 명시적인 슬로건이라고 한다면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국내 정치에선 민주주의 정착과정에서 혼란이 거듭되면서도 국민통합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갔으나 강력한 구심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미흡했다. 정부주도의 새로운 국가건설에 대한 비전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성교육은 사회화의 측면을 강하게 갖고 있었지만, 국민 개개인의 성취욕구과 현실만족도는 매우 떨어지는 수준이어서 정부주도의 사회화는 국민 통합의 동력으로서는 약했다. 그런 가운데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에 비판적이고 조소적인 시각이 국민통합을 저해하게 되

었는데 이는 향후 한국 민주화의 씨앗이 되는 동시에 정부주도의 사회화에 대한 사회의 엘리트의 반사회화적 경향을 낳는 계기가 되었다.

해방이후 등장한 이승만 정권(1948-60)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안보 이해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했고 안보와 반공을 배경으로 한 권위주의적 지배를 고착시켰다(김호진 1996, 273-278).

2. 경제성장·반공이념 주도적 권위주의체제

1961년 정치적 혼란이 극한 상황 하에서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였고 이후 30년 가까이 군사정권이 한국정치를 주도하였다. 정치체제는 권위주의, 행정 능률주의, 혈연주의, 유교적 정서가 팽배하였고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주의가 민주주의정치발전에 우선하였다. 1970년 정부는 고속도로를 건설을 계획하여 한강기적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으며 경제 개발 계획과 새마을 운동을 통해 한국 경제의 엄청난 활력을 불어 넣었다. 경제개발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 기대와 희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에너지는 잠재된다.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의식 계몽은 공동체주의로 발현했다. 서구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개인주의 정신에 기반을 둔 합리적 계산과 비판적 능력을 포함하는 정치적 시민성은 강조되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정부주도의 국가건설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력하였고 국민들과의 상호교감 속에서 오늘날 한국경제사회의 초석을 만들었다. 정부엘리트들에 의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와 추진력은 대다수 국민들을 잘 이끌어내어 정부주도의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화는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도덕재무장운동과 새마을운동 및 국민윤리교육 등은 사회화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전까지, 대다수의 시민들은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는 권위주의 정권의 발전론적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인해 억압되었으며 반민주적 통치방식은 국민들의 정치혐오감을 심화시켰다. 교육수준의 점진적 향상으로 시

민의 평균적인 정치지식이 높아지면서 효과적인 정치참여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성장과 반공이념의 주입은 균형적인 시민성형성에 기여할 수 없었다. 특히 전통적인 유교문화는 민주시민의 의식구조와 행동결정에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세력주도세력에 대한 기회주의·사대주의적인 생존전략 추구는 국민의 시민성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의적이고 충동적인 기질은 공사구별을 무시하여 토론·협상·민주적인 시민성형성에 많은 장애를 가져왔다. 일제하의 투쟁의식, 반공·군사문화의 영향을 받아 국민들은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하였다. 동시에 연속되는 정치적 불안으로 혼란 콤플렉스와 불신의식도 바람직한 시민성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김호진 1996, 344-348).

국가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는 사용자보다도 정부의 관계를 통해 더 크게 규정되어왔다(정병기 2008, 201-226). 이 시기에 노동자는 경제성장을 위한 수동적인 존재로서 정부의 통제·동원에 의해 지배적 영향을 받았고 단지 단위 사업장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의 확대는 거의 나타나기 어려웠다. 특히 국가주도의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는 국가의 직접통제 외에 국가인정의 단일 노동자대표기구를 통해 통제·동원되었다. 유신정권과 제5공화국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국가통제가 보다 강화되었으나 아울러 권익향상을 위한 상대적 저항의식도 점차 향상되어 나갔다.

소비자들에게는 기초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절약과 근면정신이 정부에 의해 강조되는 가운데 정상적인 소비자의식이 생성되지 못했다. 물자부족과 인구과잉의 상태에서는 기업생산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기업생산촉진이라는 공급자 중시의 경제구조는 수출주도형 성장경제로 이어지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물자 생산이라는 자유주의시장경제를 형성하는데도 역행한 측면이 있었다. 8)

8) 한국이 미국과 EU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힌 가운데 특정부문의 격렬한 자유무역협정반대와 일부 국민들의 자유무역에 대

산업화가 활발하게 확대되는 경제성장 시기에서도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의 가족관계가 유지되었다. 대가족 중심사회에서는 동일화(identification)의 대상이 되는 모범적인 사람이 가족성원들을 이끌어 갔다. 혈연중심의 전통적 가족 개념이 유지되었고 가정은 이타심과 도덕심이 육성되는 기반이었다. 가족구성원간의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지만 애정·헌신·존경심에서 비롯되는 '윤리적 유대'가 강했다. 가정의 출세주의적인 교육관은 정의사회구현에 많은 문제점을 생성하게 하였다.

사회적 유동성도 점증하면서 친구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즉 사망과 결혼 등에 기인한 개인적인 변화와 이사와 직업변동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환경적 변화, 그리고 친구 상호간의 이해관계차이를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등 전통사회와는 다른 변화가 발생하였다. 친구관계의 유지와 단절에서는 근접도, 친숙도, 유사성, 보상과 개인적 특징들이 중요시 되었다. 전통적인 유교질서 하의 친구관계는 사회변동과 혼란, 무질서 속에서 이해타산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갔다.⁹⁾

시민사회의 사생활은 대체로 보장되었으나 남북한간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상·학문·문화·경제·정치영역에서 결사체 형성에 일부 제약이 있었다. 특히 국가코르파티즘이 강화되던 시절에는 정치자유와 언론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어서 사회집단형성에 지장이 많았다. 이미 형성된 사회집단이라 할지라도 권위주의체제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통제도 받았으며, 특히 동원된 관주도적 사회단체가 사회집단의 활동과 흐름을 주도하였다.

이 시기에 대다수 국민들은 비교적 안정된 권위주의적 문화와 정치경제적 통제 하에서 자아 정체성 확립에 큰 혼란을 갖지 않을 만큼 외부환경의 압력이 강력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는 국민들의 자

한 이해도의 부족은 이 당시 소비자의 균형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본다.

9) 일종의 협소한 합리성(narrow rationality)이 지배하는 관계이다.

아가 내적 충동 및 요구들과 외적 압력 및 유혹이나 도덕적인 구속들 간의 긴장과 충돌할 때,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조정 및 통합해 낼 수 있도록 사회화 시켰다.

3. 연합민주주의시대¹⁰⁾

1987년 6·29선언이후 민주화 초기기간 동안에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형성되어온 시민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통해 정치적 에너지가 발산되면서 체제 엔트로피는 줄어들었다. 초기에 분출된 정치적 에너지는 정파들을 규합하여 전에 없던 강력한 정치적 일체감(identity)을 형성하는 방향에서 이합집산을 반복하였다. 이런 점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화의 효과가 있었다고 파악된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적인 정파들에게는 도덕적인 호소를 통해서 이완되어 있는 정서를 갖고 있는 국민들을 또 달리 합치게 하는 반사회화의 학습효과를 가져왔다. 정치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합해지기가 쉽지 않은 정치세력들이 현실적 이익을 위한 타협과 협상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보다 현실적이고 연합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탈권위주의 시대에서 정부주도의 국민통합 관련 교육, 즉, 사회화는 강력하게 떠오른 반사회화의 물결 속에 여러 분야에서 충돌과 갈

10) 일종의 엘리트 카르텔로서 유럽의 스위스나 벨기에, 네덜란드 등은 종교와 계급 및 인종 등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proportionality), 연립정부(grand coalition), 쌍방적 비토권(mutual veto) 및 하위체제의 자율성(지방분권주의)(segmental autonomy)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발전했다. 연합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는 합의민주주의, 협의민주주의로도 불린다. 아렌드 레이파르트(Arend Lijphart)가 정립한 개념으로 수적인 우열과 상관없이 정당들끼리 권력을 공유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Lijphart 1969, 207-225). 또한, 대통령제는 다수당에 의한 정권독식으로서 분열된 사회에서는 민주정치가 파괴될 수가 있으므로 권력을 나누어 갖는 민주주의(power sharing democracy)를 주장했다.

등을 야기하였다. 정치민주화에서 출발하여 경제민주화 등 사회의 길에까지 민주화가 증폭되어 나가면서 관주도의 시민성교육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반사회화와의 갈등과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민주화 과정에서 증폭되어 나간 한국정치의 동력은 과거 정부주도의 시민성 함양교육에서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사회의 세분화된 개별단위에서 주도하는 시민성 함양교육과 병행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

권위주의 정치문화와 성장주의 경제문화에 저항하면서 자유주의질서의 회복에 기반을 둔 보수주의적 시민사회단체와 1990년대에 이르러 민중에 보다 기반을 둔 진보주의적 시민사회단체로 환경운동연합(1993), 녹색연합(1993), 참여연대(1994)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정부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 붕괴 이후 새로운 시민운동은 보다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시민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 이념상 본래의 시민권을 향유하고자 하는 시민이 주도적인 시민성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민 책무에서는 억압된 시민권에 대한 욕구분출을 억제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질 못했으며 자연히 권위주의 시절에 강조되었던 시민성은 자연히 반사회화적인 시민성과 대치상태가 되었다. 또한 사회의 많은 세력에 대한 협상거래적인 측면에서 시민성이 형성되었다.

권위주의 정권이후로 형성되어온 국가와 자본의 보수 연합적 결속은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에 힘입은 노동운동의 정치투쟁과의 조정국면을 갖게 된다. 6·29 선언 이후 문민정부까지의 노동운동은 임금인상 등 경제투쟁 위주에서 벗어나서 경제투쟁, 노동법 개정, 인사·경영 참가요구, 참교육 실현, 토지공개념 도입 요구 등 정치투쟁현상을 보였다. 문민정부에서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금리 인하, 재정 조기 집행, 기업 투자 유인,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경쟁체제 도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자금조달에 어려움도 있었다. 시

장개발정책을 추구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통해 상품, 금융, 건설, 유통,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과의 자유로운 경제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1996년 9월에는 OECD에 가입하였다. 1995년 1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출범되었으나 1997년에 IMF사태가 발생하였다. 문민정부시절에는 경제행정규제완화 세부추진계획을 실시하는 등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억제적 경제조치들이 완화 면제 축소 허용되었다. 이어서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는 IMF관리하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시장경제주의'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노동시장유연화' 같은 보다 외압적인 경제정책이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만족할 수 없는 상태였고 파업과 구속을 통해서 노동자들과 국가·자본 조합주의의 대항 국면이 문민정부시절을 지배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과감한 재정·금융 긴축과 대외개방,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경제개혁을 실시했으나 기업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줄어들고 고용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감원과 구조조정을 노동자들이 감내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한 데 모을 수 있었다. 기업 재무구조, 고용 유연성, 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구조개선과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통해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다. 양정부시기의 노동자는 권위주의 및 성장주의 경제에서 자신의 임금과 복지에 대한 자각적 의식을 깨우쳤다. 하지만 협상조정 능력을 향상시켜나가는 가운데 유교적 전통으로 권위주의 시절에 내성화된 절제력은 IMF 극복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많은 제약들이 있었다. 소비자선택 확대보다는 지원·규제를 통해 공급자에 대한 관심을 우선하는 공급자 중심의 경제구조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생활법령과 산업구조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업들은 소비자선택을 강요할 정도로 구조와 힘을 갖추고 있었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나 그런 구조가 없다보니 시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압박할 수 있었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치열한 경

쟁을 하기 보다는 정부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소비자주의가 확대되었다.

다른 한편 세계시장에서 소비자와 밀착되지 않은 기업경영방식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식해 나갔고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학습비용도 투자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의 민주화의 공고화 과정과 IMF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나타난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행위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정부와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화의 공고화(consolidation)는 가족구성원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양성평등가족관계를 가져왔다. 2005년 2월,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7년 2월 호주제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한국사회의 가족개념에 일대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성별차이와 성불평등에 기인한 가족위기를 완화시키면서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지위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혼·재혼 가정과 여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해소되었고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다양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로 개선되어 나가면서 미래의 다양한 가족관계를 예고하였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중심의 가족관계가 붕괴되면서 조화롭고 평등적인 의식이 가족구성원들에게 확산되었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인간관계는 친구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동기의식과 서열순위, 그리고 남녀노소의 차이는 차별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해왔다. 학연과 지연 및 혈연지배적인 친구관계는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권위구조의 붕괴와 새로운 민주적 평등질서가 등장하면서 자연히 평등관계로 나아갔다. 그리고 서구의 합리주의적인 측면에서 친구관계가 정립되어 나갔다. 즉, 주고받는 것이 올바른 거래가 된다는 합리주의적인 측면이 친구관계의 규칙으로 자리를 잡았다.

사회집단성원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내집단과 외집단의 대결이 극명했던 시기이다. 소속감을 가지고 '동일시'하는 '우리'집단과 소속감

을 가지지 않으며, 동일시의 대상이 아닌 '그들' 혹은 '타인'집단으로 사회가 양분화 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소속감, 공동체의식이 강한 반면에 이질적, 적대의식을 갖는 사회집단으로 양분화 되었다. 전통적인 공동사회는 권위주의 붕괴로 권위 질서가 급격히 붕괴되어 나갔고 이익사회의 가치특성에 따라서 공동사회조차도 재단되었다. 사회집단은 다원화되어 나갔고 구성원들은 거래실리적인 방향으로 움직여나갔다. 또한 노동자, 농민, 교사, 경영자, 기업인, 의사, 약사, 변호사 등 많은 직업인들이 수많은 이익단체로 조직되어 각자의 집합적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이익표출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였다. 그러나 합리적인 조정규칙이 없고 문화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배타적인 집단이기주의와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만성화되었다.

민주화와 공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외압으로서 민주화는 권위주의 질서 하에 작동해온 자아로 하여금 일탈충동을 하게 자극하는 동시에 창조적 비판을 자각하게 하는 일종의 '성취적 자아'의 모습을 갖게 하였다. 기존의 권위주의 질서 하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해온 사회규범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을 통해 자아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되어 나갔다. 자아정체성 교육에 있어서도 사회화뿐만 아니라 반사회화 과정이 중요시 되었다.

4. 세계화시대 다문화사회

탈냉전이후로 가속화된 세계화 추세는 신자유주의가 주도하는 자본주의와 미국식 민주주의의 확산을 가져왔다. 세계화시대에 냉전 하에서의 이뤄진 많은 장벽이 무너지면서 국경간의 규제가 약화되고 점차 자유무역도 확산되었다. 단일민족의 전제하의 국민국가 건설이란 구호는 무의미해졌고 다문화사회를 기반으로 한 세계시민성의 확대를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전통의식이 되어온 유교주의, 혈연주의, 지역주의, 권위주의 등에서 벗어나서 합리적 이해관계와 기초를

둔 정치공동체의 갈등조정방식이 국민통합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었으며 정부나 민간단체 및 사회에서는 사회화와 반사회화 모두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되었다. 즉 정부 내에서도 민간사회단체 모두 국민통합을 위한 교육기제로서 사회화와 반사회화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수용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세계화 시대의 시민은 국민국가 단위의 의무와 권리 성격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세계와 접촉을 통해 나타나는 의무와 권리문제가 병행하여 나타났다. 특히 인권, 환경문제, 이민자의 권리의무 문제,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 등에서 비롯되는 배려·관용·다양성존중·정의·책임윤리·인류애·생태보호윤리·인류공동체의식 등이 세계시민의식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국민국가에서 요구되는 애국심과 민족의식은 세계시민의식의식의 개방적인 조화를 꾀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다.

다음으로 세계화 시대의 노동자는 양극화 현상, 경쟁력 없는 생산부분 대량실직발생, 노동력의 유입분산으로 국가별 발전 저해(현재 EU노동시장에 동유럽인력유입현상), 국가별특성 산업 저하 현상으로 인해 노동의 자율적 조직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나가고 있다. 정리해고와 불법파견 문제 해결,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요구와 노조탄압 해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외국인노숙자문제 및 인권 등 노동현안 해결이 당국의 과제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적 변화향상에 대한 부단 없는 욕구지향과 만족도는 국민통합의 정체성 확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실업의 급증과 중·장년층의 조기퇴직, 가정의 경제적 안정 기반 붕괴 등의 사회적 약자의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하여 개방을 통하여 비교우위가 있지 않는 부분에서의 개방은 소비자의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세계경쟁력(경제)과 양극화등 약자의 문제(사회, 환경)를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국민통합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보는 '지속가능한 발

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시장경제 속에서 가능케 하는 소비, 즉 '지속가능한 소비' 행위를 하는 소비자의 행태가 요구되지만 실제로는 과소비와 충동·소비적 경향이 현저해졌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가정기능의 분화와 전이가 과거와 차별화되었다. 가족관계는 국경과 혈통을 넘어서서 자녀가 없는 가족, 독신가구, 비동거상태의 경제공동체 등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 가족에 관한 사고가 보다 유연해지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개인 중심·세포·다원화 되고 있다. 그래서 가족구성원의 사랑과 친밀성, 경제공동체적 요소가 새로운 방향에서의 통합필요성이 제기된다.

친구란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을 말했는데, 단지 알고 지내는 사이인 지인, 같은 학교나 집단에서 지냈던 동기동창과 달리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친구기간에는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가 잘 조화를 이뤄내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친구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친구관계의 유지가 어렵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11) 과거에 비해서 친구관계의 종식도 개인, 환경, 이차관계수준의 요인들의 상호연관성 의해서 촉진될 수 있다. 또한 단절되게 될 공식적 유대들이 전혀 없고 이루어질 공적 선언들도 없으므로, 어떤 교우관계의 종식에서는 협상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리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친구관계도 세계화되고 다문화사회로 진행되어나간다.

사회집단의 성원들은 다원화·세계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거와는 다른 성격의 집합체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SNS의 급속한 보급은 세계의 동호모임을 더욱 일체화시키고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국가내의 사회집단의 성격과는 다른 문화적 상대주의에 따른 문화접점 등은 성원들의 개인적 자율판단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원화된 사회

11)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1/01/0606000000AKR20130101064200009.HTML?template=5566>, 2012/12/25.

는 더욱 다양·세분화되어 가고 공간적인 개념이 무너지면서 세계시민으로서 구성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감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시대의 자아는 다양한 역할을 갖고 복수의 상황에서 선택해야 하는 일종의 자아의 위기를 노출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에 의해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경계가 불분명하고 다양하게 규정되는 다양한 자아 모습을 보여준다. 자아는 국민이면서, 세계시민이고 또한 지방정부의 지역주민으로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과 분열적인 자아일수 있고 안정적으로 이쪽에도 속하고 저쪽에도 속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후자일 경우 즉 선택과 선별의 능력이 있는 자아에는 정체성의 혼돈은 없다. 그렇지 못할 때 공허감과 허탈감이 나타나고 자아감이 상실될 수 있다.

III. 결론

한국은 1980년대 초반까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실현하고 공산주의와 북한정권에 대해 반대하며 전 국민이 단결하여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이룩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유지해 나가는 등에 관해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적 합의는 1980년대 중반 민주화가 확산되어 가면서 붕괴되었고 한국인의 사회적 삶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주도적인 국가건설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실시되었던 시민성함양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민주화되어 나가면서 시민사회 중심의 내용과 대치되었고 조화를 이뤄나가게 되었다. 탈냉전이후 가속화되는 세계화의 흐름과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와 주도적인 세계국가의 관계 속에서 한국인의 시민성 함양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앞장에서 논의되었던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네 단계 시기와 각각의 단계의 한국인의 사회적 삶의 영역에서 강조되는 시민성 함양의 내용을 다음 도표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표 2> 한국인의 역사 사회적 삶에서 강조된 시민성 함양 내용

| 시기 한국인의 사회적 삶 | 권위주의 체제 생성기 | 경제성장· 반공이념 주도적 권위주의 체제 | 연합민주주의 시대 | 세계화시대 다문화사회 |
|---------------------|---|------------------------------------|------------------------------|-------------------------|
| 시민 | 전통의식바탕 하에 자유민주의식 배양, 경제성장우선 도구적 민주시민의식 | | 사회화 및 반사회화, 협상거래적 | 세계시민 의식 |
| 노동자 | 경제성장을 위해 수동적, 순응 | | 저항적 (반사회화) | 질적 변화 (삶의 만족) |
| 소비자 | 절약, 근면 | | 성장결과의 소비, 소비자 보호운동 | 과소비· 충동소비적 |
| 가족 성원 | 권위적 대가족, 교육, 직장우선 | | 양성평등/ 핵가족 | 세포가족/ 다문화가족 |
| 친구 | 학연·혈연·지연 지배적 | | 학연·혈연· 지연 지배적: 주고받는 관계 | 네티즌 |
| 사회집단 성원 | 억압적, 권위적 | | 다원화사회, 거래 실리적, 집단이기주의 | 다원화사회의 증폭, 다양·세분화 |
| 자아 | 해방·계몽적 자아 | | 성취적 자아 | 열린자아/ 다중적자아 |

즉, 해방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를 네 단계로 구분하고 한국인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시민성 함양의 내용을 차별화해 보았다. 그러나 각 시기별로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인의 사회적 삶의 영역들 중에서 시민, 노동자, 소비자, 가족, 친구, 사회집단, 자아의 측면에서 시민성 함양의 강조점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국민통합을 위한 방법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나아가서 시민들의 역사 사회적 삶의 역할에서 보아 국

민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런 삶의 역할에서 향후에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 요구되는 정책적 대안과 그 실천적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와 다문화사회가 한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민성들의 조화로운 통합에서 비롯된다. 세계표준(global standards)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조화시켜나가고 세계화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시민성 함양을 통한 국민통합을 전제로 한다.

< 참고문헌 >

- 강대기, 2001,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아카넷.
- 김호진, 1996, 『한국정치체제론』, 서울: 박영사. .
- 박관승, 2000,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한국언론학보』, 45(1), pp. 162-194
- 박병기·추병완 2007, 『윤리학과 도덕교육』, 서울: 인간사랑.
- 정병기, 2008, “한국 역대 정권과 노동의 관계:국가코포라티즘 이후 새로운 모색의 장정(長程)”, 『진보평론』, 제38호, pp. 201-226.
- 차명제, 2003, “민주시민교육과 한국의 위기 상황”, 제17회 시민사회포럼(서울, 9월 4일).
- Bachrach, Peter, 1967, *The Theory of Democratic Elitism: A Critique*, Boston: little, Brown.
- Barber, Benjamin R. "Foreword," Reeher, Grant and Joseph Cammarano, 1997. *Education for Citizenship*, Maryland : Rowman & Littlefield.
- Battistoni, Richard M. and William E. Hudson, eds., 1997, *Experiencing Citizenship*, Washington, D.C. : American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 Brubaker, Rogers, 1992,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m German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pra, Fritjof, 1996, *The Web of Life*, New York: Anchor Books Doubleday.
- Dahl, Robert A., 1998, *On Democracy*, New Haven; London: Yale Univ. Press.
- Elkin, Stephen L. & Karol Edward Soltan eds. 1999, *Citizen Competence and Democratic Institutions*, University Park,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Engle, Shirley H. and Anna S. Ochoa,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정세구 역, 『민주시민 교육』,

- 1989, 서울: 교육과학사.
- Gross, R. E. & D. Zeleny L., 1958, *Educating for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 Press.
- Hardin, Russel, *Collective Action*, 황수익 역, 『집합행동』, 1995, 서울: 나남출판.
- Israel, Ron, 2012, *Global Citizenship-A Path to Building Identity and Community in a Globalized World*,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Clarendon Press.
- Lijphart, Arend, 1969, "Consociational Democracy," *World Politics Vol. 21, No. 2, pp. 207-225*.
- Mehlinger, H. D. and L. Davis O., eds., 한국사회과교육회 역, 『사회과교육』, 1986, 서울: 교육과학사.
- Miler, David, 2000, *Citizenship and Nation Identity*, Cambridge: Polity.
- Parker, W. C., 1996, *Education the Democratic Mind*, N.Y.: SUNY Press.
- Superka, Douglas and Sharryl Hawke, 1982, *Social Roles: A Focus for Social Studies in the 1980s*, Boulder: Social Science Education Consortium Publications.
- Zolo, Danilo, 1993, "Citizenship in a Post-communist Era," in David Held (ed.), *Prospects for Democracy*, Stanford University Press.
- <http://blog.daum.net/bwchu/768644> 2012/11/30.

A Study on Fostering the Korean Citizenship to Consolidate National Identity

Shim, Yeon-soo
(Ho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at the disconnection and integration of our society should be integrated through a universal citizenship departure from belief. What citizens need to get harmony of diversity in our time, the universal world, under this belief? Ongoing globalization border collapsed and the citizens of the world, due to the existing national and ethnic values and it does not conflict? Citizenship through cultivating social-proofing? Cultivating citizenship if in any way from any area of social features to enhance social competitiveness? Civic education and be responsible in any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hat the subject and who? Koreans desirable and affordable for citizens to develop action plans to answer questions about the world to reflect on the limitations and capabilities of the exist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effective reporting, as citizens to present. Thus, this paper is to head to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 for Korean citizens to foster the goal ultimately placed.

The stage of development of society,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to step 4 look at each step in the area of the lives of the Koreans as seen from prominent citizens in each step was analyzed.

Keywords : citizenship, socialization, counter-socialization, social role, national identity